

도내 폐시설 관광자원으로 활용

도, 전주 충무시설 '동학혁명 문화벨트 조성사업' 연계 등 12건 국가사업 공모 통해

도내 낡고 오래된 폐교와 같은 시설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에 산재해 있는 폐자원(유휴자원)을 전수 조사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서류검토와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8개 시·군에서 12건의 폐시설을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전주 완산동 충무시설과 상관 정수장, ▲군산 시민공원과 재보선장, ▲익산 춘포역, ▲김제 외룡역, ▲남원 (구)KBS남원방송국과 (구)남원역 부지, ▲진안 안전 노재굴, ▲무주 괴복분교와 제사공장, ▲임실 (구)오수역사와 삼계면 공회당 등이다.

이들 시설들은 도가 국가사업에 공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은 전주 충무시설의 경우 한옥마을과 '동학혁명 문화벨트 조성사업'으로 연계하는 관광거점으로, 체만식 소설 '탁류'의 배경지인 군산 재보선장은 군산 내항 정비사업과 연계해 워드십 재정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또한 현존하는 간이역 중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익산 춘포역은 일제 강



이달의 에너지정책 브리핑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16년 7월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점기 수탈 역사를 상징하는 역사문화 자산으로서의 관광자원으로, 금광이었던 진안 안전 노재굴역 역시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폐광광으로 체험관광시설로 새단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포츠와 영화 등의 촬영장소로도 변모된다.

1만여평 부지에 1,600여평 공장 건

축물이 영화촬영 장소로 활용된 무주 제사공장의 경우 시설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 등을 활용해 레저체험시설로 새 옷을 입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민간 레저업체에서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1931년 건립된 (구)오수 역사는 건물 원형이 양호하게 보존돼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로 자주 활용되다 보니 전시 등 관광 사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폐자원을 유형별로 나눠 자원관리기관과 전문가, 시·군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이들 시설에 맞는 적합한 활용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해양 연안사고 42%가 '추락'

차량 해상추락·실족 등 부주의가 대부분

올 상반기 발생한 해양 연안사고 가운데 추락사고가 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해상추락·음주취사 및 실족에 의한 추락사고, 밀물시간 미인지로 인한 고립사고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상반기 해양 연안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연안사고는 21%, 사망·실종자는 18%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연안사고는 지난해 6월말 373명에서 올해 6월말 294명으로 감소했고 사망·실종자는 66명에서 54명으로 줄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42%)이 가장 많았고 고립(35%), 익수(18%), 표류(3%), 기타(2%) 순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추락사고는 지난해 87건에서 올해 123건, 고립은 89건에서 104건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차량 해상추락·음주취사 및 실족에 의한 추락사고, 밀물시간 미인지로 인한 고립사고가 증가했다. 반면 익수(물에 빠짐)사고는 135건에서 53건, 표류는 21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

안전사고의 원인은 부주의가 대부분이었다.

항포구 사고는 차량 해상추락, 행락객 음주·부주의에 의한 실족이 주요 원인이었고 차량 해상추락에 의한 사망이 91%(11명중 10명)이었다. 해안가·갯바위에서는 낚시·관광객 추락에 의한 사망 58%(19명중 8명)였다.

갯벌은 밀물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무 등으로 육지로 나오는 방향을 상실한 고립사고가 대부분으로 고립에 의한 사망이 80%(5명중 4명)에 달했다.

방파제에선 테트라포드에서 음주·낚시·실족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추락(차량 및 실족)에 의한 사망 86%(7명중 6명)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아의 활동이 시작되는 봄 행락철(3월)을 기점으로 연안사고는 4월 51건, 5월 49건, 6월 93건으로 급증했다.

안전처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물놀이와 활발한 6월을 시작으로 익수·표류·고립사고 및 사망인원 급증했다"며 "협장 안전관리와 안전 홍보·계도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박 대통령 성주 '사드 사태' 해법 주목

지역사회 이해·협조 구하는데 초점... 여당과 공조로 여론전에도 나설 듯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몽골 순방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관련한 격렬한 반발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제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에 참석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고개를 들고 있는 신고립주의에 맞서 자유무역 확대의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아시아·유럽 정상들과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몽골 공식방문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키로 하는 등 경제 외교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이같은 순방 성과가 무색하

게 국내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산군을 찾았다가 주민 반발로 7시간 가량 발이 묶이는 등 사드를 둘러싼 국론분열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주민들의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 반면 야당은 황 총리와 총리실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국민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및 결정 취소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할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대구·경북(TK)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은 박 대통령이 귀국 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4일 몽골 순방길에 앞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쟁 중단과 국민단합을 호소하며 지역 민심과 정치권의 반발 여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사태가 진정되기는 커녕 확산 일로에 놓였다는 점이 뼈아프다.

청와대는 황 총리의 발이 묶인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부재 중 국정책임자인 총리가 사실상 억류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가

떠돌고 있고 성주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사태에 개입했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다만 기막히거나 주민들이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선불리 강경 대응에 나선 경우 반정부 여론의 불씨를 당기는 셈이 될 수 있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일단 이번 사드 배치 논란이 영남권 신공항 때처럼 지역갈등과 정치권 분열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최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 기간 중이던 지난 16일에도 "사드 배치 문제로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드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설명 노력을 배가하고 여당과의 공조를 통해 여론전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사드 반대' 성주, 21일 상경 집회 예고

경북 성주군민들이 기존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로 확대·개편한 가운데 오는 21일 군민 2000여명이 서울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예고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성주군 각계각층 대표들은 지난 16일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로 개편해 발대식을 열고 이재복 기존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영길 경북도의원·백철현 군의원·김안수 경북도 친환경농업인 회장 등 4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발대식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운동을 지속하는 평화적인 시위와 서울 대규모 상경 집회는 물론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에 대해 법정 투쟁을 한다고 결의했다.

투쟁위는 또한 지역구 의원인 이완영 의원과 김항곤 군수에게 새누리당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19~20일 국회 대정부 긴급 현안 질

문을 요구하고 21일에는 대규모 상경 항의집회를 천명했다.

성주군민들은 17일 군청 앞에서 옛 새책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12일 밤 300여명, 15일 800여명, 16일 1000여명, 17일 1500여명으로 참가자는 갈수록 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의 모습도 크게 증가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 성주군청 방문 때 일부 주민들(투쟁위는 외부 세력이라고 지칭)의 폭력시태와 관련해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성주군민들은 "정부로부터 군민들이 받은 깊은 배신감과 상처는 외면한 채 사드 배치의 불법성을 가리려는 적반하장"이라며 "주민을 무시한 탁상행정과 행정절차 하자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뉴시스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진척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 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량운행(유치부, 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